불지른 뒤 "불이야!" 방화범들의 소방관 쇼

경제포커스

이 인 열
논설위원

2009년 10월 그리스 총선판을 뒤흔든 건 사회당 파판드레우 대표의 당당한 한마디였다. "돈은 얼마든지 있다." 무상 복지를 마구 늘리고 공무원을 무제한 채용하겠다는 공약 앞에 표심은 요동쳤다. 압승한 파판드레우는 축배를 든 지 한 달도 안 된 그해 11월, 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이전 정부가 속여 온 재정 적자가 알려진 것보다 두 배 많고, 나라 재정이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돈 걱정 말라던 당사자가 재정 둑이 터졌다고 고백하자 혹독한 대가는 그리스 국민의 몫이었다. 연금 수령액은 반 토막 났고, 공무원은 잘려 나갔고, 청년 실업률은 50%대로 치솟았다. 나라가 IMF 수술대에 오르자 청년 수십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다. 추락 직전인 2008년 그리스는 빚더미 위에서 'GDP 사상 최고치'란 착시를 누렸다.

그로부터 17년 후, 한국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가 2038년까지 갚을 빚은 7조원이 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가 넘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다. 들어올 돈은 급감하는데 나갈 돈은 급증하는 구조적 불균형은 더 고약하다. 세수의 절반이 넘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침체로 최근 4년 새 2조8000억원 넘게 줄었다. 반면 복지 예산 같은 고정 지출은 같은 기간 5조6000억원 넘게 늘었다. 사람으로 치면 고도 비만인데 운동은 안 하면서 고칼로리 식단을 못 끊어 살찌는 속도가 엄청난 상황이다. 김동연 전 지사는 "확장 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고 재정 위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자기들끼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 비상 상황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지난 수년간 세 차례 재난지원금 살포와 각종 기금·지방채를 끌어다 쓴 확장 재정의 '예고된 참사'다. 전문가들과 언론이 주야장천 경고했지만 도정을 이끈 주체들은 "재정 건전성 교조주의"라 비웃으며 귀를 막았다.

> 표 노려 뿌릴 땐 '돈 걱정 말라'
> 청구서 날아오자 '둑 터졌다'
> 적반하장 블랙코미디 수십 편
> 곳곳에서 동시상영 준비 중

똑같은 사실 앞에서 상황에 따라 '건전'에서 '파탄'으로 바꿔 부르는 정치적 철면피를 뭐라 해야 하나. 자신들이 불질러 놓고는 막상 잿더미 위기에 처하자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고 "불이야!" 외치는 꼴이다. 정치적 표를 구할 땐 자신들의 위대한 성과라더니 경제적 청구서가 날아오자 남 탓을 하는 적반하장에 혀를 찰 뿐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 부조리극을 목도하고도 경쟁하듯 따라 하는 지방정부들이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추석을 앞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10여 곳이 주민 1인당 수십만 원씩 현금을 뿌렸다. 얼마 전 호남의 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앞다퉈 '뽑아만 준다면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던 일도 생생하다. 제 힘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버거운 동네들이 땅 팔고 세금 끌어 돈을 뿌린다. 불과 한 세대 전 후손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자며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살던 그 정신은 어디로 갔나.

미래 세대까지 파괴하는 '방화범들의 소방관 쇼'는 다가올 더 큰 재앙의 예고편일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비극 수십 편이 동시 상영을 준비 중이다. 산꼭대기 빙하가 녹고, 그 물이 흘러 둑을 터뜨려 결국 대참사가 벌어진 네팔의 비극은 자연 현상에 국한되지 않을 것 같다. 불황 때는 어렵다고 돈 뿌리고 호황 때는 미래 대비한다고 또 돈 쓰겠다는 정부의 곳간이 버틴다면 그게 기적이다. 1년에 빚 100조원씩 늘리면서 큰소리치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에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 조짐까지 겹치면서 늘어난 지방채이자 부담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이다. 이 모든 걸 표로 심판해야 한다니 더 무섭다. 돈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인가.

윤주의 이제는 국가유산 [62]

퇴계가 태어난 안동 노송정 종택

온혜(溫惠). 마을 이름부터 따뜻하다. 온천이 가까워 겨울에도 시내가 얼지 않는다고 한다. 퇴계 이황의 조부 이계양은 이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 오늘날 국가 유산이 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이다. 흔히 노송정 종택이라고도 부른다. 솟을대문에 들어서면 '노송정(老松亭)'이란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노송정은 이계양의 호이기도 하다.

1454년쯤 이계양이 세운 집에 1501년 손자 이황이 태어났다. 노송정 우측에는 사당이 자리하고, 좌측엔 안마당을 중심으로 'ㅁ' 자형 본채가 있다. 종가의 생활과 제향의 모습을 함께 살필 수 있는 곳이다. 본채 안마당에서 바라보면 누마루를 두른 돌출된 방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이황이 태어나 '퇴계태실(退溪胎室·사진)'이라 한다.

최근에 찾아간 노송정 종택은 보수 중이었지만 다행히 퇴계태실을 살펴볼 수는 있었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이지만 안온하다.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반드시 귀한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한 승려의 말을 따라 터를 잡았다는데, 그래서인지 영남의 명문가가 되었나 싶다. 지금도 후손이 대를 이어 살면서 온기를 더하고 있다.

곧 추석이다. 예전 같으면 이즈음 종택은 분주했을 것이다. 집 안팎을 정돈하고 제기를 꺼내고 음식을 장만하고, 찾아올 일가를 맞을 채비를 했다. 종가의 명절은 집안의 큰일이었다. 지금은 종가도 평범한 우리 집도 명절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노송정 종택도 추석은 간소하게 보내고 더 이상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다고 한다. 명절을 보내는 모습은 달라졌어도 올 추석에는 모두가 덕담을 건네고, 둥근 달 아래 평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

社 說

감사원도 '사기극' 아니라는 '대왕고래', 정치는 손 떼야

감사원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검증 결과,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의 평가 방법론은 업계 표준에 부합하며 업체 대표 역시 이 분야 전문가임이 확인됐다. 업체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경쟁사와 제시 가격이 동일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니란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심해 자원 탐사의 통상 성공 확률이 2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 역시 업계 관행에 따른 시도였다. 애초 민주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대사기극' 프레임이 틀렸다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자원 탐사를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킨 1차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급함과 과욕에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산업부의 신중론을 무시하고, 탐사 자원량 최대치인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총 5배" 같은 수치를 동원해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다. 게다가 임기 내 성과를 위해 용역 완료 전 시추 기본 계획까지 수립하는 절차적 부실까지 만들었다. 정치적 고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일부 환경단체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업" "왕 사기꾼의 미몽"이라고 비난하며 "사기극"으로 몰았다. 11번째 성공한 동해 가스전이나 33번 시도 끝에 뚫은 노르웨이 북해 유전처럼 여러 시도 끝에 결실을 맺는 자원 탐사의 속성을 무시하고 과학을 정쟁으로 재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탐사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석유공사 담당 직원들은 7개월 가까이 감사원 감사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후 석유 메이저 영국 BP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지분 절반 가까이를 투자해 공동 탐사에 나섬으로써 사업성을 뒷받침해주었다.

한국의 자원 개발은 늘 정치가 망치곤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실적주의에 쫓겨 과속했던 해외 자원 개발은 박근혜 정부 들어 부실로 낙인찍혔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산해야 할 적폐로 몰려 초토화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원 개발 실무자들을 검찰과 감사원으로 불러내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자원 확보에 나서겠는가.

세계는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등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의 자원 안보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과학의 영역은 과학으로, 정책 판단은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제발 과학의 영역에 정치가 안 오면 좋겠다"는 현장의 절규를 들으라. 정치는 자원 개발에서 한발 물러나 지켜보길 바란다.

반대가 2배인 장관 임명하면 대통령 회견 아무 의미 없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맹탕으로 끝났다. '신약 로비 의혹' 관련자를 비롯해 모든 증인 채택을 막은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뒤 "걱정했는데 별것 없었다"고 했다. 부정 청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합하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집권 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60%대는 유지했던 지지율이 취임 1년 3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섣부른 증시 부양책은 시장만 교란시켰다. 친이재명계가 군불을 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론은 진영을 막론하고 국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는 여권 내부가 찬반으로 갈렸다.

이런 정국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돌파구가 필요해서다.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일정 부분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여당에서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6일 공개된 KSOI 여론조사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배가 넘었다. 호남을 제외한 전 권역, 무당층, 중도층에서 임명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앞서의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식약처장에 대한 '공익적 민원 전달'로 보기 어렵고 부정 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논평을 냈다.

18일 기자회견 때 배경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는 것은 국정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 반대가 찬성의 2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인데, 그 뜻을 거스르면서 가지는 대국민 설득 회견이 무슨 소용이 있나.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韓보다 국방비 많이 쓰고도 반군에 쩔쩔 사우디, 남 일 아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국방력이 '세계 5위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앞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문제없다"는 안규백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코드를 맞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해도 되는 이유로 우리 국방력이 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차고 넘치는 이유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게 국방비 지출이다.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 국방비로 약 112조원을 썼다. 한국(65조원)의 1.7배다. 주로 첨단 무기를 사는 데 썼다. 그런데 예멘의 무장 세력 후티와의 교전에서 지고 있다. 후티는 정규 공군·해군도 없다. 최신 무기를 갖고도 훈련 부족과 군 지휘부의 무능으로 일개 무장세력과의 전투에서 밀리는 것이다.

한국과 사우디군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군의 상대는 반군 수준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병력도 우리보다 많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까지 익혔다. 그에 반해 우리 군은 핵무기도 없고 실전도 겪어보지 못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축소됐고, 전방에서는 실탄을 뺀 채 경계 근무를 하기도 했다. 계엄 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지휘부를 갈아엎으면서 필요한 준비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사령탑들이 전방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군이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래서 미군의 도움이 절실한데 한미 관계마저 좋지 않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빨리 해치우겠다는 조급함마저 느껴진다. 이를 위해 우리 국방력을 과대평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용어
애쓰는 것 몰라주고, 선동 당하고 … 그래서 국민은 바보라구요?
뉴데일리 newdaily.co.kr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방 개혁, 온통 개혁
이름 붙이면 모두 개혁?
그런데 지지율은 왜 추락?

■ 도대체 누가 국민을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렸다.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 "**좋은 변화, 즉 개혁 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

이게 무슨 말? 《**개혁**》에 애써왔는데, **지지율이 요모양 요꼴인 것은 과격한 선동 탓**이라는 건가. 국민이 그 좋은 《**개혁**》을 몰라본다는 건가.

정치, 법률, 학문 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다. **용어는 현실을 규정하는 프레임**이다. 용어가 틀리면 모든 게 틀어진다.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보인다. ★ 검찰개혁 ★ 사법개혁 ★ 3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부동산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 단일자산 레버리지 ETF 도입 ★ 광주 반도체 800조 투자.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좋은 변화**》, 즉 《**개혁**》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듯하다. ⓒ삽화 = 챗 GPT

■ 검찰개혁으로 살판난 변호사 업계

《**검찰개혁**》을 따져보자. 검사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보완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국민 보호 기능을 수행해왔다. **검사라는 공익적 사법보호장치**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다. 제주 장미란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지 않았나. 그게 닫혔다.

이제 **달려갈 곳은 변호사뿐.**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로, 빽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천민자본주의**가 확대되겠다.

돈도 빽도 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언론.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옥 후 복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를 언론에 호소하자 판사는 《**언론 플레이**》했다고 야단치는게 법조판이다.

이제 **변호사 업계만 살판나게** 생겼다. *사법 공공 서비스는 저물고,* 《**사법의 민영화**》가 오고 있다. 이게 개혁? 악마를 천사로 부르라고?

《**사법개혁**》은 대법관 정원을 왕창 늘리고, 판사의 법률적 판단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사법부의 독립 강화**인가, **사법부 장악**인가. 《**개혁**》이라는 이름표를 떼면 민낯이 드러난다.

■ 《전작권 환수》부터 잘못된 용어

3군 사관학교 통합이 《**국방개혁**》인가. 《**전작권 환수**》라는 용어도 따져봐야 한다. 《**환수**》라고 하면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것처럼 들린다. **정치적 감성의 문제**다. 《**전환**》은 한국군의 능력, 연합지휘체계, 유사시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까지 따져야 하는 냉엄한 안보 문제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정부가 **증시를 떠받치는 데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순간,** 국민은 묻게 된다. *"내 노후자금을 왜 정부의 증시 부양 수단으로 쓰나."* 이렇게 묻는 국민은 《**개혁으로 이익을 박탈당해 저항하는 사람**》?

단일자산 레버리지 ETF는 누가 제안-결정했나. 누가 이익을 얻었나. 그것부터 설명하라. 《**증시 개혁**》이라는 포장지만 내놓아선 곤란하다. **심지어 범죄 혐의 냄새**도 나지 않는가.

광주 반도체도 그렇다. 정부가 투자 지역과 규모를 정해 놓고 기업을 떠미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인가. 《**관치경제**》 내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개혁?

부동산시장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흐름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쪽이다. 대혼란이 지속 중이다.

■ 김승원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

인식의 괴리는 법무장관 인선에서 더욱 극명해진다.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X)

*"후보자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최고위 회의 발언)

국민 반응은 어느 쪽? *"**모두를 위한 봉사자** 맞아. 보면 볼수록 훌륭한 인선이야." "**오빠라 부르는 여자를 위해 봉사나 하는 전과자**를 쓴다고?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싸그리 없던 걸로 할 돌격대장**을 골랐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추락 흐름이 답해줄 거다.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한다. 회견에서도 이 같은 현실 인식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이 진 광 사장 / 편집인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9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211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